

법 인 명 칭 경북행복재단  
발행·편집인 경북행복재단 정재훈  
주 소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155 글로벌관 3층  
T E L 054)710-8831  
홈 페이지 www.ghf.or.kr



# 경북행복 BRIEF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News | 2025

Vol. 58

## 01 경상북도 청소년의 직업 및 결혼에 대한 인식

김성훈 | 경북행복재단 연구원  
박남이 | 경상북도청소년복지상담센터 상담원

## 02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낭비하지 말자

김영미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03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결과

오난숙 | 경북행복재단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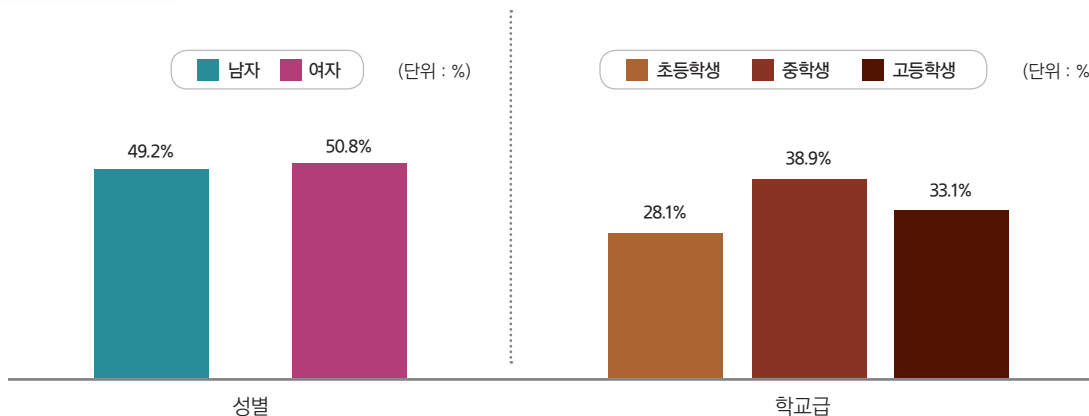
# 경상북도 청소년의 직업 및 결혼에 대한 인식<sup>1)</sup>

책임연구원 | 김성훈(경북행복재단 연구원)  
박남이(경상북도청소년복지상담센터 상담원)

## 1 조사배경 및 목적

- 이번 실태조사는 경상북도 초등학교(6학년), 중학교(1,2,3학년), 고등학교(1,2,3학년) 4,1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3월 25일부터 6월17일 까지 약 3개월간 실시하여 4,048부를 회수하여 부실응답 5부를 제외한 4,043부를 분석함
- 조사대상의 성별은 남자 1,995명(49.2%), 여자 2,058명(50.8%)이며, 학교급은 초등학교 1,137명(28.1%), 중학교 1,575명(38.9%), 고등학교 1,341명(33.1%)을 조사하였음
- 본 조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음
- 조사 목적은 도내 청소년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청소년을 위한 제도 및 상담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 경상북도 내 청소년의 진로 및 결혼인식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청소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그림 1.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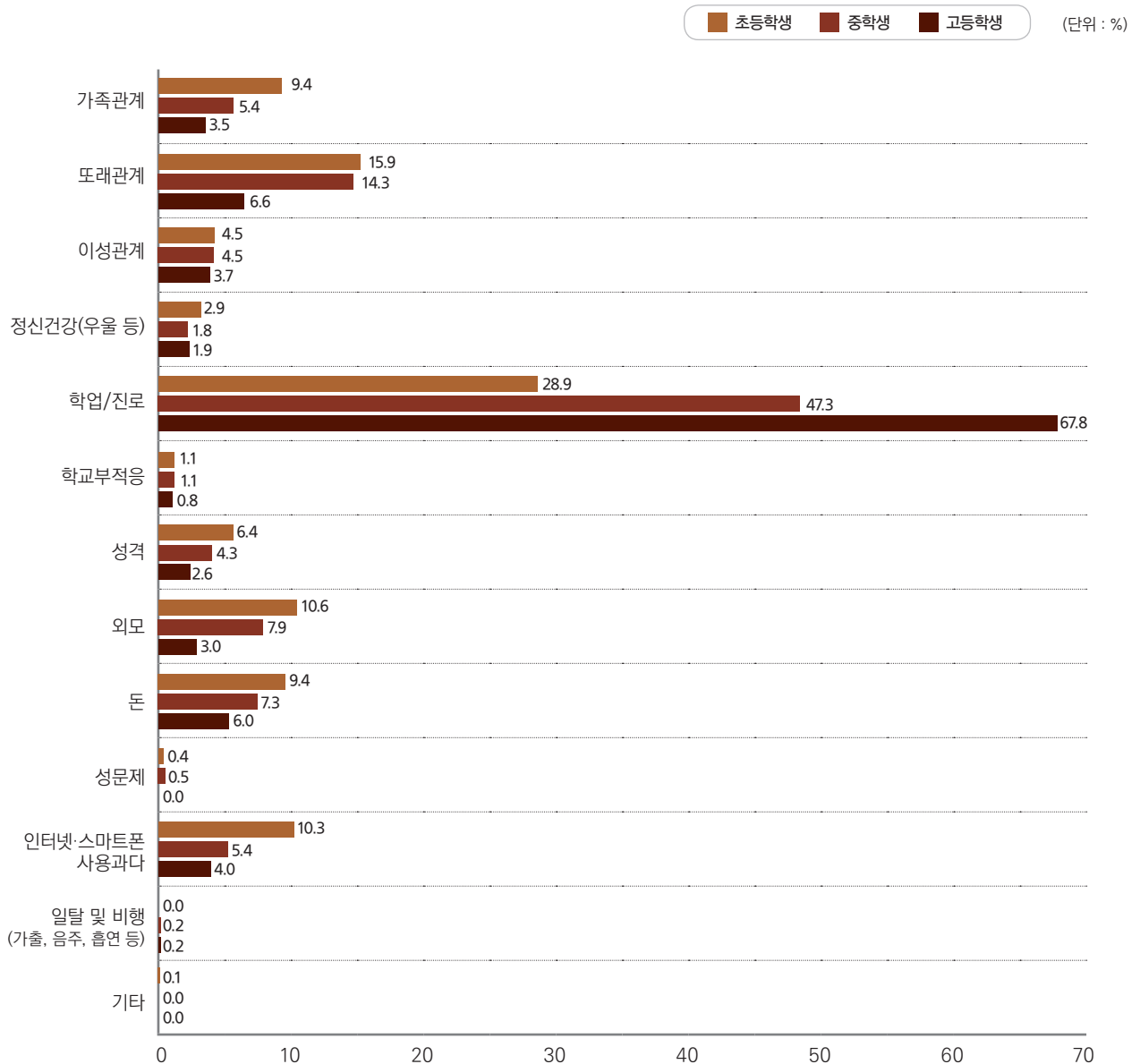
1) 2025년 경상북도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중 청소년 진로 및 직업탐색, 결혼 인식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2 실태조사 결과

### 1. 청소년의 고민하고 있는 내용

-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학업/진로(초등학교 28.9%, 중학교 47.3%, 고등학교 67.8%), 또래관계(초등학교 15.9%, 중학교 14.3%, 고등학교 6.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다만, 비율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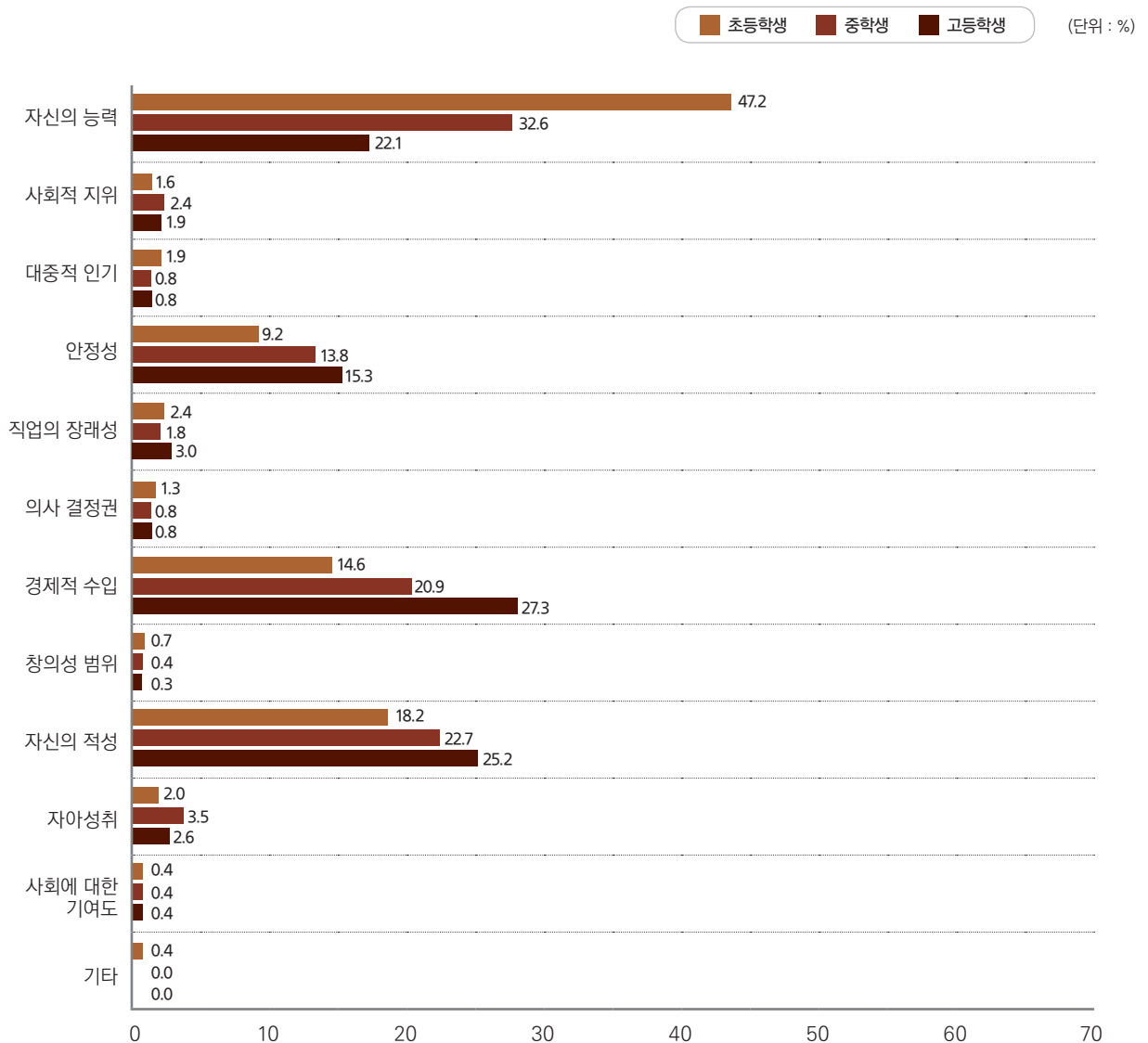
그림 2. 고민하고 있는 내용



## 2. 직업선택 기준

- 직업선택 기준을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응답이 47.2%로 중학교(32.6%), 고등학교(22.1%)보다 높게 나타났음
- 반면 고등학생은 “안정성”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는 응답이 15.3%로 중학생(13.8%), 초등학생(9.2%)보다 높게 나타남
- 또한, 고등학생은 “경제적 수입”이 27.3%로, 중학생(20.9%), 초등학생(14.6%)보다 높게 나타났고, “자신의 적성”도 25.2%로 중학생(22.7%), 초등학생(18.2%)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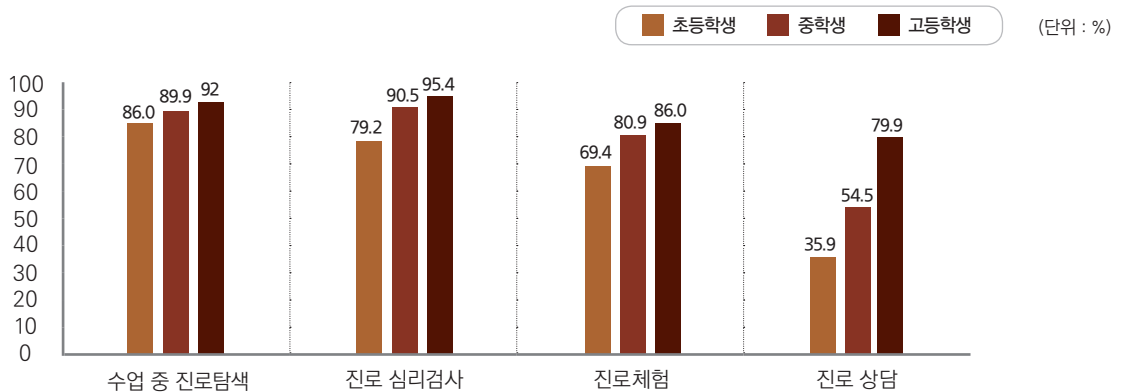
그림 3. 직업선택 기준



### 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교육 경험을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이 “수업 중 진로 탐색” 경험에서 92.0%로 중학생(89.9%), 초등학생(86.0%)보다 높았고 “진로 심리검사” 경험에서도 고등학생이 95.4%로 중학생(90.5%), 초등학생(79.2%)보다 높았음 또한 “진로 체험” 경험에서는 고등학생이 86.0%로 중학생(80.9%), 초등학생(69.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 상담” 경험에서도 고등학생이 79.9%로 중학생(54.5%), 초등학생(35.9%)보다 높게 나타남 이를 통해 고등학생이 진로교육 경험이 중학생·초등학생들보다 많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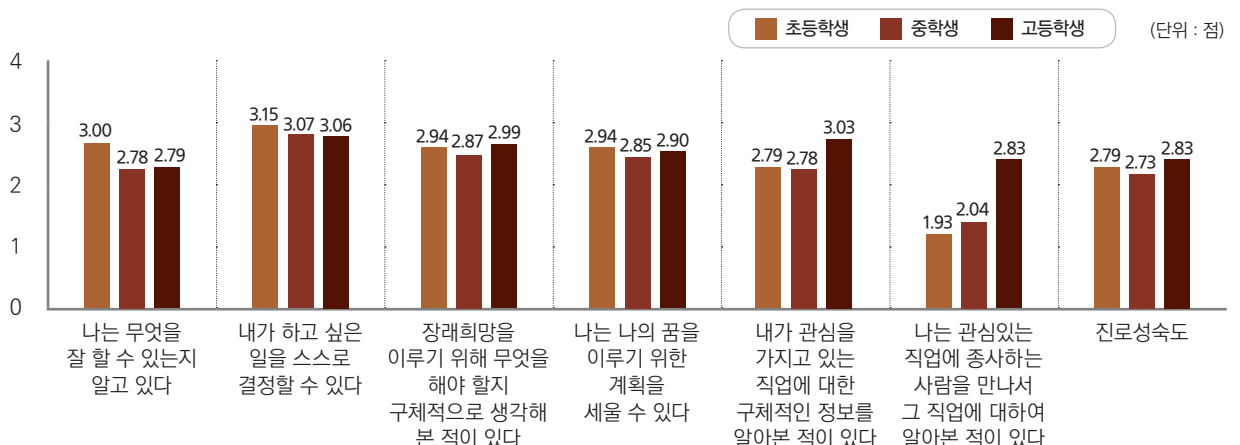
그림 4. 진로교육 경험



### 4. 진로 성숙도

- 진로 성숙도를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진로 성숙도 평균은 고등학생이 2.83점으로 초등학생(2.79점), 중학생(2.73점)보다 높게 나타남 하위요소 중에서는 “나는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초등학생이 3.00점으로 고등학생(2.79점), 중학생(2.78점)보다 높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초등학생이 3.15점, 중학생(3.07점), 고등학생(3.06점)보다 높았음. 또한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초등학생이 2.94점 고등학생(2.90점), 중학생(2.85점)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이 2.99점으로 초등학생(2.94점), 중학생(2.87점)보다 높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본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이 3.03점으로 초등학생(2.79점), 중학생(2.78점)보다 높게 나타남 마지막으로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는 고등학생이 2.83점으로 중학생(2.04점), 초등학생(1.93점)보다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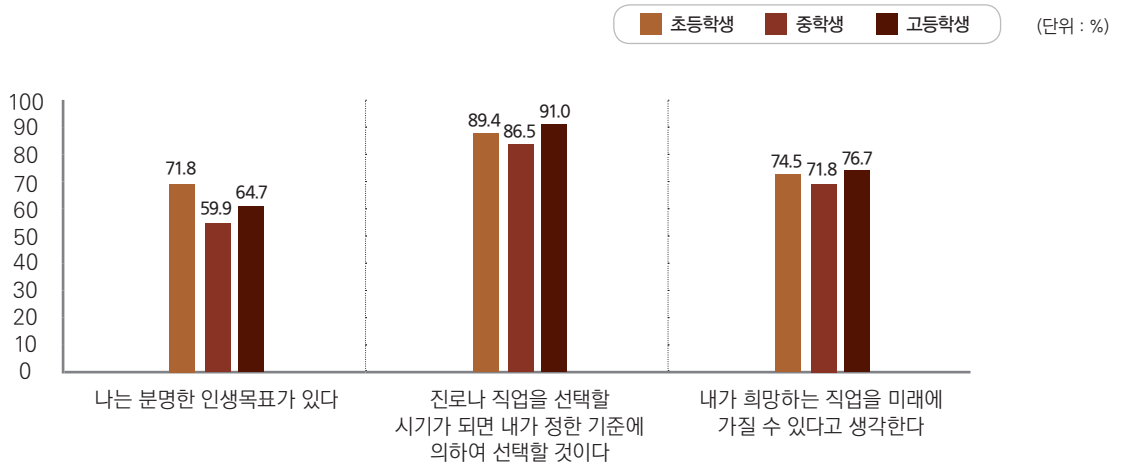
그림 5. 진로 성숙도



## 5. 직업관

- 직업관을 학교급으로 살펴보면, “나는 분명한 인생목표가 있다”는 응답에서 초등학생이 71.8%로 고등학생(64.7%), 중학생(59.9%)보다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학생의 직업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진로나 작업을 선택할 시기가 되면 내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택할 것이다”는 고등학생이 91.0%로 초등학생(89.4%), 중학생(86.5%) 순으로 나타났고 “내가 희망하는 작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고등학생이 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생(74.5%), 중학생(71.8%) 순임
- 이를 통해 고등학생의 직업관이 초등학생 및 중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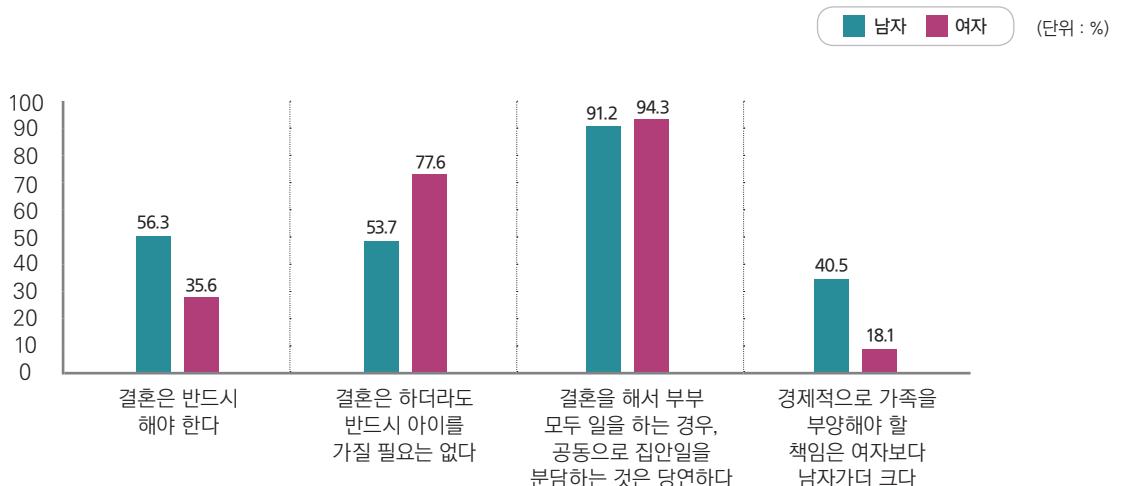
그림 6. 직업관



## 6. 결혼에 대한 인식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응답에서 남자는 56.3%, 여자는 35.6%로 나타났고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의 응답에서는 남자(40.5%)가 여자(19.1%)보다 더 높게 나타남
- 반면 “결혼은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응답에서 여자는 77.6%, 남자는 53.7%, “결혼을 해서 부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공동으로 집안일을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의 응답에서는 여자 94.3%, 남자 91.2%로 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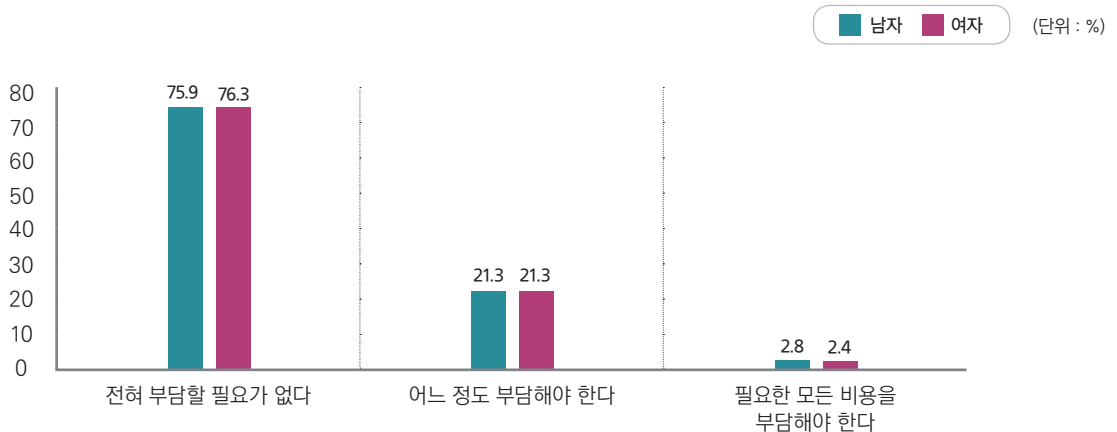
그림 7. 결혼에 대한 인식



## 7.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 인식 : 결혼할 때까지

- 성별로 보면, 남자(24.1%)가 여자(23.7%)가 결혼할 때까지 부모가 경제적으로 비용을 부담 해야한다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음. 부담에 대한 강도에 있어서 남자(21.3%), 여자(21.3%) 모두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가 동일하게 나타났음

그림 8. 부모의 경제적 비용 부담 인식 : 결혼할 때까지



## 3 시사점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모두 학업/진로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고등학생은 응답자의 67.8%로, 10명 중 7명 정도가 학업/진로 고민을 하고 있어 고등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직업 선택 기준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자신의 능력”(4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은 “경제적 수입(27.3%)”과 “자신의 적성(25.2%)”이 높게 나타났음. 초등학교부터 자신의 능력을 강화하고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진로교육 경험에 있어서 진로상담의 경우 초등학교(35.9%), 중학교(54.5%), 고등학교(78.9%)로 수업 중 진로 탐색, 진로 심리검사, 진로체험보다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별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진로 성숙도 중 “나는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적이 있다”의 문항에는 초등학교(1.93점), 중학교(2.04점), 고등학교(2.24점) 모두 진로 성숙도 전체평균보다 0.6점에서 0.8점 낮게 나타났음. 청소년이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직업관 중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초등학교 74.5%, 중학교 71.8%, 고등학교 76.7%)고 응답한 비율이 70%대로 희망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자는 56.3%, 여자는 35.6%로 나타났으며, “결혼은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에서는 여자는 77.6%, 남자는 53.7%로 나타남  
여학생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와 “결혼을 하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라는 비율이 남학생보다 낮아 성별 차이에 따른 맞춤형 결혼 인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6). 2016년 전국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4). 2025 청소년백서.

본 내용은 2025년 경상북도 청소년 실태조사 내용 중 청소년 진로 및 직업탐색, 결혼 인식 부분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스페셜 코멘트 ·

## SPECIAL COMMENT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널리 공감되지만, 교과 시간 우선, 입시 중심 교육체계 속에서 진로 탐색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및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교육청과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틈새 시간을 확보하여 학업과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1순위라는 결과는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고등학생은 진로 불안이 심화되는 시기이므로, 진로를 결정할 때 강점과 흥미에 대한 명확한 인식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진로의식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지역 기업, 직업인, 대학 등과 협력하여 직업 멘토링 등을 운영함으로써 실제 직업 세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 현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구체적인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결혼에 대한 성별 인식 차이는 청소년들의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강점을 기반으로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진로와 가치관, 삶의 의미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경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직무대행) **이미숙**

# 인구위기 대응의 골든 타임 (Golden Time)을 낭비하지 말자

김영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구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불과 반세기도 되기 전에 출생아 수가 1/4 미만으로(1970년 100만 명 → 2023년 23만 명) 토막 나버린 상황에 대해, 인구학자들은 전쟁이나 바이러스 발생 등 특수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라고 말한다. 다수의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의 극단적 초저출산이 향후 인구 구조 전환을 가속화 하고 급속한 인구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Dead Cross) 지점을 지났다. 65세 이상 노인 천만 시대를 맞이한 2025년을 기점으로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장기간의 초저출산으로 단기간 내에 출산율의 유의미한 반등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는 어쩌면 정해진 미래인지도 모르겠다. 인구위기는 사망 선고인가? 아니면 사회 대개조, 혁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인구위기를 대개조, 혁신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화두로 미래를 고민하고 집단지성의 힘과 공동체의 온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정해진 듯 보이는 암울한 미래가 긍정적 열린 결말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글을 작성한다.

## 극단적 저출산, 저출생의 본질은 생존권, 출산권 박탈

우리나라의 드라마틱한 출산율 감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다. 1차 인구절벽(1983년)은 강력한 정부 주도 산아제한 정책의 성공으로, 2차 인구절벽(2001년)은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및 가족관계 불안정성 증대의 영향으로, 3차 인구절벽(2017년)은 복합적인 사회구조 요인의 결합과 가치관 변화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물질적 풍요를 위해 압축적으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들이 빚어낸 산물이다.

2005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시작했고 그간 많은 정책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정책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압도적인 수준으로 사회 구조적 요인이 악화했다. 현재 한국 사회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사회 구조적 환경은 경제적 자립과

이행(transition)부터 녹록하지 않다. 대졸 고학력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경쟁 심화, 실질 소득 증가 부진과 부채 증가, 부동산 급등으로 인한 주택 마련 부담 증가 등의 요인은 점차 나빠지고 있다. 결혼,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현상(M-shape)은 여전히 존재한다. 불균등한 가사, 육아 부담과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현실도 여전하다.

이러한 전통적·구조적 요인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청년들의 가치와 태도가 변했다. 결혼, 출산은 선택이 됐고, 이에 대한 동의와 의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비혼 동거,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통, 교류의 장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로 넘어갔고, 온라인 세상에 넘쳐나는 부정적 콘텐츠는 청년의 불안, 좌절감, 우울감을 실제보다 증폭시키며 관계를 단절, 고립시키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경쟁적 육아 경주(the rug rat race), 집중 육아를 부추겨 고비용 양육 문화를 만들고, 육아의 어려움에 대한 과도한 정보는 부모가 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락은 현상적으로는 혼인 감소와 기혼 부부의 출산 감소에 기인한다. 하지만 숫자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이 낳기 힘들 이전에 생존하기 버거운 청년의 불안한 현실이 놓여 있다. 첨단전략산업의 좋은 일자리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의 청년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 SNS가 일상이 된 현실은 청년의 부정적 미래 전망, 불안 및 비관 정서를 증폭시키고 단절과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 IT, AI 강국, 디지털 전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밋빛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이 실상은 인구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 본질에 대한 성찰적 비판이 없다면, 우리의 대응은 실효성을 잃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합계출산율 감소)과 저출생(출생아수 감소)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어떤 용어를 선호하든, 둘 다 숫자로 드러난 현상에 주목할 뿐이다. 하지만 숫자에 매몰되면 해법은 요원하다. ‘2023 세계 인구보고서’는 “한국인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출산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가 없어서다. 출산권보다 출산율에 집중하는 근시안적 정책을 쏟아낸 것이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한 이유”라고 적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인구위기 본질은 생존경쟁에 내몰려 버겁고 불안한 청년의 현실, 경력 단절이 두려워 아이 낳는 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청년의 현실, 가족·결혼·출산·돌봄 등 모든 생애 선택에서 기존 규범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상황에 맞춰 주체적으로 설계하고자 하는 청년의 가치 수용에 실패한 법규범과 정책 및 행정이라는 것이다.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5-49세 국민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묻은 결과, 평균 1.8명(남성 1.9명, 여성 1.7명)이었다. 원하는 자녀 수 1.8명과 현실 합계출산율 0.7명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이 간극을 최대한 좁히는 것이 앞으로 정부와 사회의 책임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제대로 된 대응을 차일피일 미뤄 청년들의 정부와 사회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더 떨어진다면, 이상적인 자녀 수조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인구위기 대응,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인구위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생존 문제이고,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문제이다. 따라서 인구수를 조절하는 인구정책 차원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차원으로 대응해야 한다. 사람 한 명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흔들리는 청년의 삶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고, 그 위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 가족과 삶을 설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축소·소멸 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모든 개인과 가족의 삶이 이어지고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 그것이 정부를 포함한 모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약 20년 동안 정부가 각종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고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해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이 오히려 악화하자, 백약이 무효, 예산 낭비, 정책 실패 등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다. 급기야 2024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개최해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사회부총리를 겸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까지 포괄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저출생 대응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강력한 집행부처 신설을 통해 정책 추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정책 실패를 거버넌스 문제(더욱이 부처 신설)만으로 치환하기에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초고령화, 지방소멸은 매우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

하지만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이와 같은 논의조차도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대로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게 될까 우려스럽다. 2015년 이후 추락하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 9년 만에 반등했다. 반등 폭이 작고 정책 효과보다는 코로나 19 기저효과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존재하나, 추락만 하던 추세가 처음 반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의 회복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의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반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거 사적 영역에 놓여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출산, 돌봄, 가족관계가 저출산 대응과정에서 공적 이슈로는 전환했으나, 국민의 기본권으로는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제 이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

### 출산권, 돌봄권 보장의 헌법 명문화

“낳기만 하십시오. 국가가 키워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의제가 된 후,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이렇게 외쳤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출산 장려가 아니라, 출산을 선택할 권리, 자녀를 돌볼 권리, 자녀 돌봄으로 직장이나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원한다. 필요에 의한 호의나 암묵적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 선택권’이 돼야 한다.

권리의 보장은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지원하고, 권리를 보장하지 못했을 경우 책임을 묻는 것까지 포함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20년 동안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일하면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의 권리가 되지는 못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사람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가족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도 있지만, 기업을 움직일 책임은 정부에 있다. 단편적인 정부 정책 사업들의 나열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국민의 권리로堂堂하게 보장받으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명문화해야 한다.

앞으로 지역소멸 가속화로 출산, 돌봄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다. 지방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이등 국민이 되지 않도록, 어느 지역에 태어나고 살든 기본적인 출산, 양육, 의료, 교육 등 필수 서비스를 권리로 보장받아야 한다.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균형 발전이 아니라, 출산권과 돌봄권의 차별 없는 보장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

###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저출산 대책 수백조 예산, 백약이 무효라는 언론의 호된 비판이 난무했지만, 실상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놓고 보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라는 주머니 속에 광범위한 사회정책 예산들이 꼬리표를 달고 들어와 수백 조로 부풀려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나, 그것이 저출산 대책 무용론으로 빠져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미래세대 아동 가족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모든 사회정책을 아동 가족친화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말뿐인 출산,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선언은 의미 없다. 재정 투입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영유아기에 집중된 정부 지원을 생

애주기 필요에 맞춰 확대 재편하고, 일·가정양립제도를 일하는 부모 모두의 권리로 만들기 위해 보장 범위, 보장 수준을 전면 확대하고,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까지 빈틈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청년과 아동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현행 자원 구조의 한계를 탓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구체적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 혹은 교육세 일부를 소위 '저출생특별회계'로 전환해 아동 가족 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초저출산 지속 심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국세가 자동 연동되는 자원 구조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지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전환해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합계출산율이 1.2명 수준인 일본은 2023년 12월, 건강보험·개호보험을 개혁하고 노인을 포함한 전 세대의 부담을 높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어린이 금고' 신설 계획을 발표했다.

### 새로운 가족 규범과 가치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

저출산 현상은 변화된 청년의 가치 위에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의 가치와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가족 규범과 가치를 창출하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결혼제도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상과 표준에 대한 강박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가족이 되는 방식이 결혼제도라는 한 가지 방식으로 고정된 경직성은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추구하는 청년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새로운 사회계약은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의 가치와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 가치를 반영한 가족 관련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가족 내 평등한 관계 확립을 위한 불합리한 법적 제도를 개선하고,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 부모 및 법률혼 중심의 일반가족 위주 지원체계를 '아동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3년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했던 신생아 특별공급 정책의 경우,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자격을 부여했는데, 이러한 것이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가족주의가 강고한 우리 사회에서 가족을 꾸리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매우 역설적인 상황에서, 현행 가족제도와 결혼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경계를 조금 느슨하게 만든다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친밀감과 유대감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가족 상황에서 태어나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 청년들의 삶을 둘러싼 변화된 현실과 가치 지형을 반영하되, 기성세대 가치와 조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추진돼야 한다.

### 인구위기 대응, 공동행동이 필요하다!

인구위기 대응은 정부 단독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동 과제이다. 정부 주도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지방자치단체, 국회, 기업, 민간 부문 등 사회의 모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참여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 정부 - 장기적인 인구전략 수립과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수도권 집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과도한 교육경쟁, 젠더 불평등, 경직적 가족 규범 등 구조적 난제와 얽혀 있다. 수도권 집중 완화, 교육경쟁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화를 통해서 일·가족 양립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세대에게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고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2024년 정부는 인구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약속한 바 있는데, 신설된 부처는 중장기 전략을 기획하고 추진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향후 인구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더욱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고령화 가속화에 맞춰 계속 고용, 정년 연장,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한 노인복지 수혜자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초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의료·장기요양·주거 시스템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대 간 회계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공적 연금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전략이 필요하다.

그간 인구위기 대응 장기 전략 수립을 통한 개혁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지만, 당장 성과는 없고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뤄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미래 인구 추계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개혁의 시점을 역으로 백캐스팅(backcasting)해 로드맵을 설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감한 리더십으로 위기에 대응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에 앞서 미래세대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아동 가족 정책을 강화해 출산율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야 한다. 새로운 정부 부처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와 관심이 핵심이다.

### 지방자치단체 - 다양한 민관 주체의 연대를 통한 혁신적 맞춤 정책 실행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구위기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을 걸고 인구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선두에 서 있다. 6대 분야(만남 주선, 행복 출산, 돌봄 강화,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150대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도 ‘아이 플러스 1억 드림(기존 정부 지원금과 합산해 출생아 1인당 18세까지 총 1억원 지원)’을 포함해 저출생 극복 6종 세트(차비드림, 집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를 추진하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의 체계화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구조개혁 추진과 법제도 개선, 보편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양육, 돌봄, 교육, 보건의료, 주거 지원 인프라의 공백이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 체계적인 전담 조직 구축,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 확보, 행정조직 내 다부서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수 요건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지역 내 기업, 대학, 학계, 시민사회, 지역기관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가칭 ‘인구전략회의’를 통해 지역의 인구 문제를 토론했고, 주민 의견을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피드백함으로써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일·가정 양립, 일·생활 균형 기반을 만들으로써 청년 유출을 막고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지원제도를 개선해도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일터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기업,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고용센터,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들을 아울러 ‘가족친화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족친화기업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회 - 상설 인구위원회 설치해 사회적 공론화 주도

향후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기 전략 실행과 구조개혁 추진은 국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5년 단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정판, 보완판이 만들어지며 정책의 지속성, 일관성을 담보받지 못한 것은 정책 실패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장기 전략과 개혁이 계속 추진될 수 있으려면, 국회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 상설 인구위원회를 설치해 장기적인 인구전략 수립과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 주된 역할이 민의를 모으고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이 필요한 구조개혁을 위한 공론화는 정부보다 국회에 더 적합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공적연금개혁, 계속 고용 및 정년 연장, 지방의 행정체계 재편, 저출생 특별회계 도입, 가족 및 결혼제도 개혁, 출산권과 돌봄권의 「헌법」 명문화 등은 정부 부처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자문위원회로도 역부족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인구위기 대응 전략을 끌고 나갈 힘이 국회에 있다. 국회가 이와 같은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때,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업 - 인구위기 대응의 주역으로

그동안 인구위기 대응은 정부 위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생산인구 감소, 인구감소 등 인구위기의 타격은 결국 기업에 직격탄이 된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 해법인 일과 육아의 병행, 청년고용은 결국 기업이 앞장서야 해결이 가능하다. 기업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가족친화경영은 기업의 핵심 운영원칙이 되어야 한다.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가족 돌봄의 책임이 있는 노동자가 채용, 승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2024년 정부는 ESG 자율공시 기준에 일·가정양립 경영지표를 반영하기로 했고, 일·가정양립 경영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수기업에 정부 입찰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제 정부가 견인하고 기업은 따라오는 ‘정부 주도형’에서 ‘민관 협력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핵심 주체로 참여하고 정부, 민간단체들과 함께 가칭 ‘인구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윈스턴 처칠 총리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waste a good crisis)”는 명언을 남겼다. 현재 우리 사회가 놓인 인구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좋은 위기, 즉 낡은 시스템과 가치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처칠의 명언은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좋은 위기에 더하여, 절체절명의 골든 타임(Golden Time)을 낭비하지 말자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2025년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 결과

책임연구원 | 오난숙(경북행복재단 연구위원)

## 1 교육 배경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내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제도가 2017년부터 의무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법적 지위 및 역할 >

- 인권지킴이단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제4항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을 보장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정 기구임. 그 역할은 인권침해 예방, 인권상황 모니터링,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 및 진정 등 인권보장 및 인권보호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원칙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단원은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되며,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공공후견인, 사회복지교수, 지역주민, 시설이용 장애인 부모 등 외부 단원이 과반수(50% 이상)를 넘어야 함. 시설 운영자나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단원에서 제외되며, 시설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내부단원(이용 장애인 및 직원)은 전체 단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요 활동으로는 외부단원 1명 이상이 참여하는 월 1회 인권 상황 점검, 연 4회 이상의 정기회의, 인권침해 의심 상황 발생 시 사실 확인 및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및 진정 등이 있음

### < 경상북도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 72개소 >

- 장애인거주시설(62개소)-법인시설 56개소, 개인시설 6개소
- 장애인단기거주시설(10개소)

## 2 교육 실시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북행복재단은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8일까지 경상북도 4개 권역(남부, 동부, 서부, 북부)의 인권지킴이단 13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음

### 1. 교육 내용

교육 내용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뒤편과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NHRC) 권고 사항,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이 사용하는 '이용자 인권상황 점검표(그림도구)'를 교육자료로 활용함

표 1. 인권지킴이단 교육 과정별 상세 내용 및 목표

과정	세부 목표	주요 내용 및 활동	근거 자료 및 핵심 주제
1. 마음 열기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의 보편적 가치 이해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성찰. 나를 '타자와의 관계', '인류의 구성원' 관점에서 인식하여 인권 의식 토대 마련.	세계인권선언, '존엄, 자유, 평등, 연대로 만나는 인권 교과서'
2. 인권 이해	인권지킴이단의 법적 역할, 기능 및 독립성의 중요성 인식	인권지킴이단 구성(외부단원 과반수), 활동(월 1회 점검) 속지. 시설 통제 구조로부터의 독립 필요성 강조.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 인권 실천	국가 권고 및 법규에 기반한 실무 역량 강화	NHRC 2022년 권고 및 2025년 장애인복지 시설 사업안내의 인권지킴이단 운영 편 상세 검토.	NHRC 권고(과밀 수용, 통장/휴대폰 사용 제한) 및 2025년 지침.
4. 인권 실천 토론 및 성찰	현장 적용 방안 모색 및 사후 조치 절차 숙지	인권침해 의심 사례 진정·고발 절차 (생각하기-알리기-조사-문제 해결) 숙지. '당장/천천히 실천해보고 싶은 것' 공유.	인권침해 의심 사례 진정·고발 절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2. 교육 과정 분석

교육의 만족도 조사 결과 및 참여자 의견을 심층 분석하여, 현장의 실질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및 국내외 우수사례에 기반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3 2025년 인권지킴이단 교육 결과 분석

#### 1. 교육 만족도 분석 : 높은 기대 속 드러난 개선 과제

##### 1) 정량 분석 : 높은 만족도 확인

교육운영 전반 만족도(평균 3.67/4.0), 업무 도움 정도(3.70/4.0), 지속 필요성(3.70/4.0) 등 모든 지표에서 매우 높은 긍정적 평가를 기록함. 이는 교육의 필요성과 실용성에 대한 현장의 강한 공감대를 증명함

표 2. 교육 만족도 분석(4점 만점)

평가 항목	남부권 (N=31)	동부권 (N=24)	서부권 (N=36)	북부권 (N=44)	전체 평균 (N=135)
1. 교육운영 과정 전반	3.72	3.80	3.59	3.59	3.67
2. <장애인 인권 및 인권의 가치>	3.64	3.70	3.50	3.71	3.66
3. <인권침해사례와 필요한 조치>	3.64	3.70	3.56	3.65	3.66
4. 업무 도움 정도	3.72	3.80	3.53	3.71	3.70
5. 교육과정 운영	3.72	3.90	3.47	3.68	3.66
6. 교육 안내 적절성	3.72	3.85	3.53	3.71	3.69
7. 교육의 지속적 필요성	3.80	3.65	3.47	3.71	3.70
8. 교육규모 확대 필요성	3.64	3.70	3.38	3.71	3.57

##### 2) 정성 분석 : 구체적 개선 요구

높은 만족도 이면에는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있었음

- **교육 환경** : "주차공간 부족" 등 교육 몰입을 저해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공통적으로 제기됨
- **교육 방법** : 일방적 강의보다 "토의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상호작용 기반의 '참여형 교육'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음  
단, "종사자 발표 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은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안전한 참여 방식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함

#### 2. 교육과정 및 내용 요구사항 분석 : '도구'와 '사람'의 문제

##### 1)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그림도구)'의 전면 개선 요구

###### ■ 교육과정에서 요구의견

"질문지 꼭 변경해주세요", "인권지킴이점검표 질문지가 꼭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 현행 점검표의 비현실성에 대한 강력하고 반복적인 개선 요구가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상함

###### ■ 다층적 문제점

###### - 언어·인지적 장벽

'성적 수치심', '나이에 맞는 대우' 등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법률·사회적 개념은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불가능에 가까워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 - 시각자료의 문제점

'도구를 사용한 체벌' 그림은 "너무 자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으며(트라우마 고려 설계 원칙 위배), '대가 없는 노동'을 묘사한 청소 그림은 자립 훈련과 구분이 모호하여 질문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음

### - 획일성의 실패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사이즈-핏츠-올(one-size-fits-all)' 방식은 개인의 다양한 특성을 무시하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항 수를 줄이고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함

표 3.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그림 도구) 개선 요구 사항

점검표 문항 번호	현행 문항 내용	주요 문제점 및 실무적 난제	구체적 개선 제안
4번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기 없는 이용자에 대한 고려 필요. 언어소통 장애인의 지원 여부 확인 필요	일반전화로 대화하는 그림을 추가.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 도움을 받아 전화를 사용하는지 질문 추가
5번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	건강 관리를 위해 음식 종류나 양을 조절하는 거주인이 있어, 일률적인 자유 기준 적용이 부적절함	거주인의 건강 상태와 장애 정도를 감안하여 문구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6번	의복과 머리 모양 선택의 자유	그림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움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는 그림이나 옷을 고르는 사진으로 변경
8번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	입주자에게 금전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금전 사용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교육 방안 마련 필요
11번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	청소 그림은 자립 훈련이나 자율적인 공간 정리로 오해될 수 있어 노동과 자립 지원 구분이 모호함	'귀하는 원하지 않은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로 변경; 그림을 힘든 농사일 등 강제적인 노동 상황으로 구별하여 삽입
12번	체벌이나 폭력 경험 유무	도구를 사용한 체벌 그림이 너무 자극적이며 혐오감을 줄 수 있음	자극적이지 않은 다른 그림으로 대체
13번	성적 수치심 경험 유무	'성적 수치심' 단어 자체가 지적장애인에게 이해하기 어려움	'귀하는 불편한 터치나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로 문구 변경. 그림은 성적인 언어, 원치 않는 스킨십 등을 반영하고, 이성 직원이 아닌 동성 직원에 의한 상황 등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야 함

이용자 인권상황점검표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용, 그림도구)	
시설명	점검일시
장애인성명	장애유형
점검방법 <input type="checkbox"/> 면담 <input type="checkbox"/> 관찰 <input type="checkbox"/> 서류	점검자성명 (인)

점검질문	답변 및 관찰내용	비고
 <p>OO씨, 어땠어요?</p> <p>1. 귀하는 자신의 나이에 맞는 대우를 받고 있나요?</p>		
 <p>2. 귀하는 개인 물품을 개인 수납공간에 보관할 수 있나요?</p>		
 <p>3. 귀하는 외출이 자유로운가요?</p>		

점검질문	답변 및 관찰내용
 <p>4. 귀하는 전화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p>	
 <p>5. 귀하는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나요?</p>	
 <p>6. 귀하는 의복과 머리 모양 등을 선택할 수 있나요?</p>	
 <p>7. 귀하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나요?</p>	

점검질문	답변 및 관찰내용
 <p>8. 귀하는 자신의 금전을 자유롭게 사용, 관리하고 있나요?</p>	
 <p>9. 귀하는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나요?</p>	
 <p>10. 귀하는 불만과 의견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나요?</p>	
 <p>11. 귀하는 대가 없는 노동을 한 적이 있나요?</p>	

점검질문	답변 및 관찰내용
 <p>12. 귀하는 다른 이용자 혹은 직원 등에게 체벌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나요?</p>	
 <p>13. 귀하는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p>	
<p>14. 기타 시설에 대한 불만 및 불만 사항이 있나요?</p> <p>• 점검일문 외에 기타 불만 및 불만 사항에 대한 확인 문항임.</p>	
<p>15. 기타 점검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p>	

점검총괄의견	
조치사항	

## 2) 인권 보호의 전제 조건: '종사자 인권'에 대한 최우선 수요 확인

### ■ 교육만족도 분석 결과

향후 가장 필요한 교육 주제 1순위로 '종사자 인권 및 권리'(21.0%)가 꼽혔으며, 이는 '장애인 인권 및 감수성'(19.4%)보다 높은 수치임

### ■ 심층적 의미

이는 거주인 인권 보호의 주체인 종사자들이 정작 자신의 노동권, 감정 노동, 소진(burnout) 문제 등 인권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함을 의미함.

거주인 인권과 종사자 인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중 권리(Dual-Rights)' 관점의 도입이 시급함을 시사하며, 종사자 인권이 거주인 인권 보호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보여줌

## 4 결과 및 발전 방향

### 1. 인권상황점검표(그림도구)의 혁신 : '이지리드(Easy Read)' 원칙 적용 및 디지털 전환

#### 1) 내용의 전면 재구성

추상적 개념 질문을 구체적 경험 질문으로 전환. (예: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적이 있나요?" → "누가 허락 없이 당신의 몸을 만져서 기분이 나빴나요?", "누가 당신에게 불편한 말이나 농담을 한 적이 있나요?" 등 구체적 행동 기반 질문으로 세분화)

#### 2) 디지털 전환 및 경북형 맞춤화

"태블릿 PC 등 정보화 기기를 활용한 동영상 매체 기반의 인권상황 점검 방식 도입" 이 제안됨. 앱 개발 시 음성 지원 기능에 표준어와 함께 경북 지역 방언(사투리) 옵션을 추가하여 접근성 극대화

#### 3) 개발 거버넌스 구축

개발 과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당사자 감수'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지리드 전문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포함된 다분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실효성을 확보

#### 4) 순환적 개선 체계 법제화

신규 디지털 점검 도구에 상시 피드백 기능을 탑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소 2년에 한 번씩 점검표를 공식 개정·업데이트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음

### 2.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 1) 교육 철학의 전환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정보를 캐내는 '조사관'에서 이용자의 자기표현을 돕는 '의사소통 지원가' 및 '권한부여가'로 교육의 재정립이 필요함

#### 2) 커리큘럼 혁신

새로운 교육과정 수요 1순위였던 '종사자 인권 및 소진 예방'을 교육으로 신설하고, '인권 친화적 도전적 행동 지원' 등 실무 중심의 참여형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본 내용은 경북행복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2025)' 결과를 재구성하였습니다.

· 스페셜 코멘트 ·

## SPECIAL COMMENT



지난 몇 년동안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례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국가의 책무 이행과 문제의 본질을 찾기 위한 다양한 탐색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교육도 그 현장 중 하나일텐데요. 이번에 진행된 경북권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역량강화교육 현장은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인권지킴이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교육 현장의 목소리로만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인권지킴이단 제도의 법적·행정적 개혁 방안, 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향후 개발 방향으로까지 제안하고 이후 개선방안까지 제시한 점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깊고 인권친화적인 경북행정을 고민하는 주요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인권지킴이단이 직접 사용하는 인권상황 점검표(그림도구)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킴이단과 이용인분들간에 주요한 소통도구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촉진하기 보다는 장벽이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장벽이 된다'는 주장을 구체적 근거를 찾기 위해 진행된 이번 교육과정에서 교육참가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이후 새로운 점검표를 기획, 제작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길 기원합니다.

본 교육결과에서 제안한 <인권상황점검표>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이지 리드' 철학과 핵심원칙 그리고 실제 적용사례가 경북지역에서 권익옹호를 위한 매개로 작용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실천을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더불어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방향에 대해 연구자, 교육기획자, 교육참가자, 교육활동가 간에 긴밀한 연대와 꼼꼼한 대화, 그리고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인권배움터에서 교육참가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이 연구의 주요한 소재가 된 경우는 15년 교육활동가 삶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교육참가자들은 사회복지영역에서 살아내면서, 삶과 노동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한 생동감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맥락이 교육공간에만 머물렀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번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교육결과>에선 4회기 교육결과를 다듬고 경상북도가 추진해야 할 방향까지 연결해주신 점,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만 누리는 부듯함이 다른 교육활동가들의 현장에도 확산되길 기원해봅니다.

인권교육공동체 <사이> 대표 허미옥



# 청렴(清廉) 소식지

| 경북행복재단 청렴이야기 제6호 |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 알기 Q&A

###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 -

**Q**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누구인가요?

**A**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는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공기업의 장 등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공직자로,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재산 '공개' 의무자의 범위와 같습니다. 일부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임원에 해당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상 고위공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Q** 겸직 신고를 한 내역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

**A**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 업무 활동을 했다면, 현재 해당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 및 겸직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그 내역을 누락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 신고 사항 등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이 있거나 주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

**Q**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제제가 있나요?

**A** 소속기관장은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선진복지 경북을 만들겠습니다.

# 경북행복재단 인권경영 헌장

## 경북행복재단 임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라는 재단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and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나 계약 당사자, 도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하나/ 우리는 장애, 성별, 지역, 학력, 나이, 인종, 종교, 국적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한다.
- 하나/ 우리는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통해 고객가치를 중시한다.
- 하나/ 우리는 경영, 연구 및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한다.



경북행복재단  
정책연구부



# 밝은 내일, 도민이 행복한 경북!

## MISSION

경상북도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가치 실현

## VISION

경북형 사회통합 서비스로 지역균형 발전 선도 기관

### 경영철학 & 경영목표



정책선도  
(Scale-UP)

도정방향 부합  
정책연구비율 100%



책임복지  
(Service-UP)

서비스품질 경쟁력 강화  
127개 시설, 8200명  
미래의 주역 청소년 육성  
110,000명



조직혁신  
(Build-UP)

ESG 경영전략 고도화  
가족친화인증 획득

### 전략목표 & 전략과제

#### 경상북도 중앙 허브기관 기능강화

- 경북도 K-저출생 극복 전략 성공 주도
- 경북형 행복 중심의 고품질 정책연구 선도

#### 생애주기별 책임복지 실현

- 도민 생애주기별 사회 서비스 실행력 강화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로 책임복지 실현

####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 ESG 책임경영으로 사회적 책무성 이행
- 포용적 조직문화 혁신으로 소통활성화·가치내재화

### 조직구성

#### 정책연구사업

정책연구부

#### 서비스 제공사업

복지지원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경영시스템 관리

전부서 공통

「경북행복 BRIEF」는 경북행복재단의 보건·복지 연구성과 및 주요 동향을 경상북도민에게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분기별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